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2012년 5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대만문제와 중미관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1. 머리말

역사적으로 대만문제는 중미관계에 영향을 미친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해왔다. 이유는 바로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면서 미국요인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One China) 원칙에 의거하여 대만문제를 자국의 주권 및 영토와 관련된 핵심이자 내정문제로 간주해 왔다. 반면,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만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양국이 대만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대만문제를 활용해왔다.

냉전 및 탈냉전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은 이에 반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즉, 미국은 소위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에 기초하여 대만문제를 동북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카드’ 로 활용함과 동시에 미국의 중요한 무기·상품 시장으로서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대만정책에 대해 중국은 대만문제가 내정문제라는 점을 들어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대항보다는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이 전체 중미관계의 악화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그대신 새롭게 나타난 ‘중국요인’이 중미관계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역시 기존의 ‘미국 주도, 중국의 대응’ 형태에서 점차 ‘미국의 주도권 약화, 중국의 적극 공세’ 로 변하고 있다. 즉,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과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양보와 존중을 기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일치하면서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대만문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양안관계(兩岸關係)의 강화 역시 대만문제의 중미관계에 대한 민감성 하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로 3가지(미국요인, 중국요인, 양안관계)를 제시하고, 이들 변수들이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냉전과 탈냉전 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를 살펴본 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3가지 핵심변수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향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관계를 전망한다.



II. 냉전과 탈냉전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소위 ‘대만문제’는 19C말~20C초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 및 1940년대 국공내전(國共內戰)의 결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내정문제라고 할 수 있으나, 미국이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대만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국제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회복 이후 소위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존재했고, 결국 대만문제는 현재까지 중미 갈등의 가장 첨예한 사안으로 작용해왔다.

1.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

(1) 중국의 대만 인식: 내정문제이자 통일의 대상

청일전쟁(1894~1895)에서 패한 청조(淸朝)는 마관(馬關)조약(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일본에게 대만을 할양하였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자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은 1943년 11월의 ‘카이로선언’의 규정, 즉 “일본이 강탈한 중국의 영토인 만주, 대만 평후(澎湖)군도는 중국에 귀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1945년 10월부터 대만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함으로써 대만문제가 태동하게 된다. 이후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 정권이 대만지역으로 이주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립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대만문제는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된다.

1949년 이후 중국은 대만문제를 자신들의 주권 및 영토보전과 관련된 핵심문제로 간주해 왔다. 즉, 역사적으로 대만은 중국 대륙의 불가분의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서 대만문제의 해결은 국가주권, 영토보전, 민족통합, 자주성 회복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안보이익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전략문제이자, 중국의 내정문제라는 것이다(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1994, 348). 특히 중국은 자신들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은 1971년 이후부터 대만문제는 중국의 고유한 내정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곧 양안통일을 의미한다. 중국은 1971년 이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은 중국과 불가분의 일부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대만의 독립이나 이탈을 인정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¹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동안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계속하거나 대만의 독립을 조장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 중국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중국은 비록 1987년 11기 3중전회 이후 기존의 무력적 방식에서 평화적 방식으로 통일방식을 전환했지만, 중국의 주권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대만문제 해결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중국이 대만문제를 자신들의 고유한 내정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또한 중국은 대만문제를 중미관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전략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중국의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위한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안보환경의 조성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냉전시기는 물론이고 탈냉전시기에도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한 잠재적인 위협 국가인 미국과의 군사적 대항을 피하는 것이 중국의 중·장기적인 전략 목표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閻學通 1997). 따라서 중



국의 국가안보와 발전전략에 있어서 대만과 대만해협은 중국의 해상교통과 해상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동남연해 해상의 중요한 병풍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방안보의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2) 중국의 대만정책 : 강 · 온 정책 병행

1949년 이후 2008년까지 중국의 대만정책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1949년부터 1978년 12월 개혁개방 노선을 결정하기까지의 시기로서, 중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과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 국민당을 대륙에서 축출한 이후 대만과의 통일을 미완성된 전국해방전쟁으로 인식함으로써 무력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무력 수단을 통한 대만 해방 정책은 1950년대 미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개입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방침은 유지하되 평화적 수단을 통한 국민당 정부와의 협상 및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1955년 5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대만의 해방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고, 1971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의 UN 복귀 및 대만 축출을 통해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또한 1972년 2월 닉슨(Richard M. Nixon) 대통령 방중 및 이후의 중미관계 정상화 과정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평화적·외교적 수단 및 무력해방 정책기조의 병행을 통한 압박에 대해 대만은 여전히 중국과의 대화를 거부하였다.

2단계는 1979년부터 1987년 10월까지의 시기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결정과 중미 수교(1979.1.1)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1949년 이후 30여 년간 대립해오던 양안관계²는 평화적인 대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은 대외 개방과 대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내외 환경 조성을 중시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 강화가 필수적이었고, 대만문제의 해결방식 역시 기존의 무력적 해결방식에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978년 12월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의 천명과 함께 대만과의 평화통일 방침이 확정되었고,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통해, 대만과의 ‘3통4류’(三通四流)를 제의한다.³ 1982년에는 “하나의 중국, 두 개의 제도(一國兩制)” 방식의 통일 방침을 제의하였다.⁴ 반면 대만은 중국 정부의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원칙에 입각한 평화공세에 대해 평화를 위장한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소위 ‘3불정책’(不 접촉, 不 담판, 不 타협)으로 대응하는 한편 ‘삼민주의’(三民主義)를 중국통일의 지도원칙으로 제시한다.

3단계는 1987년 11월부터 2008년까지의 시기로서, 그 동안 중국의 평화공세에 대해 불응하던 대만이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만인의 대륙 친척 방문을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양안관계가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천명 이후 평화적 방식의 통일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대만 역시 ‘반공대륙(反攻大陸)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무력적 해결방식을 통한 본토 탈환에서 평화적 해결방식을 통한 평화정착과 교류협력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대만은 1991년 3월 통일정책의 최고 지침으로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였고,⁵ 대만과 중국은 각각 해협교류기금회(海峽交流基金會, 1991.2 설립)와 해협양안관계협회(海峽兩岸關係協會, 1991.12 설립)를 설립함으로써 반관반민(半官半民) 성격의 교류협력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간 민간차원의 관계 진전과는 별도로 정치적 차원에서의 교류는 여전히 답보 상태를 지속하였다.

한편 중국은 대만과의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교류협력과 함께 대만의 분리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도 동시에 추구하였다. 대만 총통 선거(1996.3) 전후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세 차례의 미사일 발사 훈



련을 강행했고, 2000년 3월 대만총통선거를 전후하여 ‘통일백서’와 ‘국방백서’ 등을 발간하여 대만이 중국과의 무력협상을 무기한 지연시킬 경우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대만에 대한 군사 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추진할 시 ‘비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저지한다는 내용의 〈반국가분열법〉(反國家分裂法)을 제정(2005.3.14)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냉전과 탈냉전시기 중국의 대만정책은 초기의 무력을 통한 대만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평화적인 협상 및 외교적 수단을 통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또한 중국은 대만과의 교류협력의 범위와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도 대만의 분리독립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압박정책을 취했다.

2. 미국의 대만문제 개입과 이중정책

(1) 대만의 전략적 · 경제적 가치와 미국의 개입

미국은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형성 및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으며 여전히 ‘미국요인’은 대만문제의 절대적인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문흥호 2008). 미국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만문제에 개입하고 대만을 지지 · 지원해 온 이유로는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대만이 보유한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대만의 안보를 자신들의 아태지역에서의 안보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대만방어를 위한 미국의 직접개입을 선언하였다. 당시 미국은 대만의 지위를 서태평양지역의 안보와 결부된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대만의 안보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선언하였다(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84, 83). 특히 대만은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잇는 중요한 해상교통로(Sea Line)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지역에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미국에게 대만은 두 번째로 큰 무기판매 시장으로서 가치가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82년의 ‘공동성명’(8.17 커뮤니케)을 통해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 자제 및 종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1992년 미국 F-15 전투기 150대의 대만 수출을 시작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 이유를 들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데,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대만 해협의 안정과 지역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⁶ 이러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 추진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모든 군사협력을 중단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통상분야에서의 가치 역시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고 중시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대만과 미국의 교역량은 1979년 92억 달러 수준에서 1998년 51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대만은 미국의 7대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2000년에는 미국과 대만의 교역량은 649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06년 609억 달러, 2007년 640억 달러, 2008년 612억 달러 등으로 점차 늘어났다. 2009년에는 전년도의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467억 달러로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0년에 다시 618억 달러를 기록했다(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0). 현재 대만은 미국의 9대 무역대상국이고, 미국은 대만의 3대 무역대상국이다.

결국, 미국은 대만해협의 안정이 미국의 세계 혹은 지역 전략 이익의 하부구조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미국은 대만을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전략 추진을 위한 교두보로서 인식하고, 중국의 강대국화로 인한 자신들에 대한 패권도전을 막을 수 있는 카드로 인식한다.

(2)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과 이중정책

미국의 대만정책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1950년 한국전쟁,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회복, 그리고 1979년 미중수교 등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중국의 국공내전 과정에서 미국이 지원하던 국민당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패배하고 대만으로 후퇴한 이후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미국은 대만문제에 대한(군사적)개입을 유보하였으나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급격하게 변화한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기존의 불개입정책에서 벗어나 미 7함대로 하여금 중국의 대만공격에 대비토록 명령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그리고 1954년 12월에는 대만과 미국간에 '공동방어조약'이 체결되었다.

1960년대 중국의 원폭실험 성공(1964.10)과 닉슨 행정부 출범 이후 대내외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미국의 對중국 정책은 다시 한번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1971년 제26차 유엔총회 2758호 결의안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United Nations: UN)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대만(중화민국)을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 규정했다. 특히 미국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합의한 '상하이커뮤니케', 1979년 미중수교 및 미·대만 단교 등을 규정한 '수교 커뮤니케', 1979년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을 통한 발생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문제 해결을 위한 '8.17 커뮤니케'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⁷

그 동안 미국은 대만문제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속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시켜나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문흥호 2008, 15-40; 김재철 2007, 206; 서진영 2006, 273). 클린턴(William J. Clinton)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만과의 비공식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적 모호성'에 입각한 정책노선을 유지하였다.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 혹은 대결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만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2001년 4월 중국 전투기와 미국 정찰기 충돌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나타냈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라는 전략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나 9.11테러 발생 이후 부시 행정부는 대항과 압력행사를 통해 중미관계의 핵심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또한 글로벌 차원의 이슈(핵확산 및 테러 방지 등)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강조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클린턴 행정부 시기와 부시 행정부 시기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 혹은 협력은 대부분 미국이 대만정책을 주도하고 중국이 이에 반응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국교 수립 과정에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대만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독립 불가 원칙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거나 독립 움직임을 지원하지도 않지만, 동시에 중국이 무력을 포함하는 물리적인 방식을 통해 대만을 통합하는 것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은 중국이 원하는 통일과 대만이 원하는 독립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자국의 입지를 극대화하고 자국에 유리한 최적의 양안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에 기초하여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이중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위협하고 침공해서는 안되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일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중



국의 예상되는 무력행사로부터 대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3.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갈등 사례

냉전과 탈냉전시기 중국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승인 문제,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대만의 ‘국민 투표’실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문제, 대만지도자들의 미국방문 문제, 미국과 대만 군사교류 및 군사기술 협력 문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지속해왔다([부록] 참조). 이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그 동안 대만해협에서 발생한 3차례의 위기상황 모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고, 특히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갈등의 핵심으로 작용해왔다.

(1)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 및 국교 수립 이후에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었고, 그 중에서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는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 갈등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1978년 수교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1972년 ‘상하이커뮤니케’에서 승인했던 “중국과 수교,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 폐기, 대만으로부터 미군의 단계적 철수” 조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러나 1979년 중미 수교 이후 4월에 美 의회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켜 미국이 대만에 방어용 무기의 판매를 지속할 것을 법률로서 보장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1982년 4월 미국정부는 6,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군사무기부품과 전투기부품 등을 대만에 판매하겠다는 사실을 의회에 통보했고,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범하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항의했다.

이후 1982년 미국과 중국정부는 ‘8.17 커뮤니케’를 통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정책을 중단할 것이고 특히 대만에 수출하는 무기의 성능과 수량 면에서 수교 이후 몇 년 동안 제공하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중국은 1984년 1월 자오쯔양(趙紫陽) 총리의 방미를 통해 ‘대만관계법’을 포함하여 미국이 대만 안보에 관여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등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1989년 6월 4일 천안문사건 발생 이후 중미관계의 경색국면에서 무기수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천안문 사건 이후 미국은 민주화와 국제인권을 앞세워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으며, 고위급 관계자의 중국방문 연기, 첨단기술 상품 수출금지, 무기판매금지, 군사기술협력금지, 투자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對중 봉쇄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1992년 9월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부시 행정부는 대만에 150기의 F-16전투기를 수출할 것을 결정했다.

클린턴 행정부 역시 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대만에 무기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1991~1998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은 200억 달러에 달했고, 1997년부터는 대만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미국의 최대 무기수입국이 됐다(顏聲毅 2004, 258).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은 중미간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며, 중국의 내정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안정성을 침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항의했으나 미국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미국은 또한 1995년 대만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방미와 1996년에 3차 대만해협위기 등을 거치면서 대만과의 군사관계를 확대시켰다. 또한 미 의회는 1998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 미 국방부가 아태 지역의 지역미사일방어체계(Theater Missile Defense: TMD)에 일본과 한국, 대만 등의 동맹국들을 포함시켜 연구하도록 했다. 1999년 10월 26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대만안전 강화법’을 통과시켜, 미국이 대만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고, TMD 관련 무기를 대만에 수출하며, 미국과 대만간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대만당국으로 하여금 ‘두 개의 중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등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결국 2000년 2월 동 법안은 미 하원을 통과시켰다.

2001년 4월 중국전투기와 미국군용기 출동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는 4척의 구축함과 패트리엇-3 미사일을 포함한 18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함으로써 양국관계는 다시 불편한 국면을 초래했다. 그러나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중미 양국은 건설적 협력관계로 진입하였고, 특히 2005년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양국은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개최 등 고위급 접촉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미국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다시 대두되기도 했으나,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기조가 유지되는 분위기였고,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과거보다 자제되는 등 대만요인이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냉전과 탈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멈추지 않았고, 당시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갈등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이에 대해 반발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미국은 자신들의 대외전략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 변화에 따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확대 내지는 자제해왔고, 중국은 자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및 영토 완정을 해치는 사안이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중미양국의 전략적 협력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 3차 대만해협 위기와 미국요인

그 동안 중국과 대만의 군사안보적 차원의 위기는 크게 3차례 발생했고, 모두가 당시의 중미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⁸ 1954년 11월 1955년 5월까지 전개된 1차 대만해협위기와 1958년 8월~10월까지 전개된 2차 대만해협 위기는 모두 중국과 미국과의 군사대치라는 배경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1·2차 대만해협 위기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대만을 군사기지화 함으로써 이른바 제국주의(미국)와 반동주의(대만)의 군사연합으로 제기될 수 있는 위협을 우려하고 있었다(牛軍 2004; Gertov and Hwang 1990). 1995~96년 발생한 3차 대만해협 위기는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온 중미관계의 대립과 충돌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즉, 당시 전체 중미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쌍방간 갈등이 존재하였다(牛軍 1998).

1995~1996년의 3차 대만해협 위기를 촉발하게 된 시대적 배경으로는 1989년 천안문사건과 1991년 소련 붕괴로 대표되는 냉전구조의 해체, 그리고 미국 클린턴 정부와 대만당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중미관계는 모든 영역에서 대립과 갈등을 보인 반면 미국에게 있어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인권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대립과 이로 인해 빚어진 1993년 시작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최혜국 대우 지위 연장과 관련된 대립, 1993년 시작된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에서의 갈등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은하호’ (銀河號) 사건, 1994-95년 초 중미간 지적재산권 문제에서의 대립과 이로 인해 발생한 중미간의 무역전쟁의 발생 등이 그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부시 행정



부 시기 미국은 대만을 대중국 경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한편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화하였다.⁹

클린턴 행정부 초기인 1994년 9월에는 미국은 대만 정치인의 미국 통과 방문을 허용하고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켰다. 또한 1995년에는 리덩후이 前총통에게 미국방문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1979년 대만과의 단교 이래 최초로 대만 총통의 개인자격으로의 미국방문이 이루어졌고, 특히 1996년 3월로 예정된 대만 최초의 총통 직접선거 과정에서 대만 독립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중국은 1995년을 전후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만의 사실상의 '독립노선' 추구로 간주하였고, 또한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 고위 지도부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는 등의 불만을 표출하는 등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위기가 고조된다.

1995년 7월 7일 중국은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동중국해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과 지대지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新華社)이 보도했다. 중국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은 21일부터 26일까지 대만 근해 반경 10해리 공해상에서 M-9급 지대지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고, 8월 15일부터는 2차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대만해협에 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른다. 1996년 3월에는 대만 동북해안에 위치한 기룡항에서 25~25마일 떨어진 해역과 대만남부의 가오슝에서 80~9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인민해방군의 육해공군이 참여한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¹⁰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장인 차오스(喬石)은 동년 3월 20일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거나 외세가 침입할 경우 본토와 대만의 통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3월21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沈國方)역시 “대만의 새 총통이 국가를 분연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또한 “대만이 국제공간 확보를 주장하며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는 것은 ‘두 개의 중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분리독립 기도를 완전 포기해야 한다”고 대만의 외교행보를 비난하였다(新華社 1996).

당시 미국은 1995년 12월 19일 미 항공모함 니미츠(Nimitz)호를 대만해협에 파견했고, 1996년 2월 6일에는 다시 미 해군함정을 대만해협에 통과시켰다. 동년 3월10일에는 니미츠호와 인디펜던스호(Independence)를 대만해협에 보냈으며, 3~4월에는 미 제7함대를 보내 대만해협 근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훈련을 감시(monitor)하도록 했다. 중국은 미국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3월 18일 대만해협 북단의 평潭島(平潭島)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국 3월 23일 대만 총통선거 이후 중국은 일체의 미사일 실험을 중지하였고, 리덩후이 총통이 54%의 득표율로 당선되자 대만 역시 중국에 상응하는 군사훈련을 취소함에 따라 대만해협 위기는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정부는 당시 대만해협위기를 초래한 것은 대만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분리주의적 경향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인식했다. 즉, 1995년 리덩후이 총통의 방미 결과는 중미관계 정상화 이래 양국간의 정치적 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대만의 분리주의정책을 고취하였으며, 동시에 대만정부와 국제사회의 반중 분위기를 조장한 것으로 중국지도층은 판단한 것이다.¹¹

결국 3차 대만해협위기는 중미간의 깊은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첨예한 대립의 결과물로서, 1995년 7월부터 1996년 3월 사이의 중국의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은 대만문제의 중요성과 민감성에 대한 미국측에 대한 경고이자, 대만 내 정치세력들의 분리주의 경향에 대한 억제 의미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만, 당시 중국은 대만 본섬이나 금문(金門)·마조(馬祖)가 아닌 그 주변의 작은 섬을 공격대상으로 함으로써, 위기관리 과정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III.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변화 및 요인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는 국제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손실을 가져왔지만,¹² 반면에 ‘G2’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을 촉진하는 시발점이기도 하였다. 즉, 21세기 국제질서는 이미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decline)와 ‘나머지의 부상’(the Rise of the Rest) 으로 특징 지워지는 ‘포스트 아메리카’(Post-American World) 체제로 진입하였고(Zakaria 2008), ‘나머지’ 중에서도 중국은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중국역할론’의 증대에 따라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축(G2)으로 부상하였다.

새로운 ‘G2’체제는 미국 주도의 힘의 배분이 신흥대국(특히 중국)으로 분산되는 다극화가 이루어지고, 강대국관계 역시 기존의 이념·안보·군사력 경쟁이 아닌 경제력·규범·제도·문화의 경쟁이자 초국가적 어젠다(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물 등)를 둘러싼 경쟁으로 다원화되는 상호의존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 구축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성 및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이고 독점적인 우위 혹은 이익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현실적·구조적 제약성을 상호인정하고 양국 관계를 향후 전략적 협력 위주로 운용하고자 노력해 왔다(Lampton 2009).

이로 인해 그 동안 중미관계의 핵심문제이자 민감한 사안으로 작용했던 대만문제의 중요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도 중미관계가 협력 기조를 유지할 때 대만요인이 양국관계에서 차지하는 민감성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미국이 대만정책을 주도하고 중국은 이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중미관계와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중국도 대만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했다. 또한 최근의 양안교류협력 강화 추세 역시 중미관계에서 대만요인이 차지하는 민감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3가지 변수(미국, 중국, 양안관계)차원에서 접근한다.

1. 미국의 對중 전략적 협력 모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역할론’의 증대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갈수록 심화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美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 및 일반기업의 채권은 2009년 1조4,640억달러(약 1,586조4,290억원)에 달하고,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10년엔 43%까지 높아졌다(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2). 특히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국채를 보유 및 추가 구매할 것을 요청하는 등 경제분야에서 미국의 중국 의존성이 증대되었다(Morrison 2009, 8).

현존 패권국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장차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이제 더 이상 옵션이 아니며, 미국 세계전략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미국은 금융위기 극복 및 글로벌 이슈(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북한·이란핵문제 등)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라크전쟁 등과 같은 글로벌 이슈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 내에서는 대만정책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Owens 2009; Miller Center 2011; Gilley 2010, 44-60; Glaser 2011, 80-91). 이는 최근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 및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미관계의 발전을 희생하면서까지 대만카드를 쥐고 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오랜 불협화음의 역사를 갖고 있고, 중미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해 온 매우 위험스런 관계였다. 그러나 그 동안 ‘강한’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단절 내지는 약화 요구들을 무시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 구조 속에서는 미국이 경제회복을 위해 대만이 아닌 중국과의 관계를 더 많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당시의 중미관계가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대만관계 역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징들이 나타났다. 먼저, 미국이나 대만 모두 중미관계와 관련된 민감한 의제들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즉,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 문제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 그리고 쇠고기 문제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절제가 이루어졌고 자극적인 발언들은 자제되었다. 또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대만의 對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고, 중미관계의 의제에 있어서도 대만문제와 같은 전통적 안보 의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협력 등과 같은 당면 의제에 우선순위가 뒤쳐졌다(孫哲 2010, 274-276). 2009년 중미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만문제의 중요성과 대만문제에 있어서 그 동안 미국이 언급했던 약속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고, 양국이 합의한 3개의 커뮤니케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표명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 역시 200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협력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전에 비해 긴박성이 떨어지는 추세는 보였다. 그러나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0년에 1월 30일 미국방부는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약 64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이미 2008년 10월 부시 행정부 시기에 결정된 사안이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 추진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과의 모든 군사협력을 중단했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何亞非)은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招致)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추이텐카이(崔天凱) 외교부 부부장 역시 미국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완정에 관련된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중미양국이 피차간의 핵심이익과 중대사안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1년 9월에도 미국 국방부는 대만의 F-16A/B전투기 145대의 업그레이드와 군용기 부품판매 및 훈련프로그램 판매 등을 포함한 58억5,200만 달러의 무기 패키지를 판매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였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부 부부장(張志軍)이 주중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측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중국 국방부 역시 “미국이 중국과 지속적인 군 관계발전을 유지하려면 무기판매를 철회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중국외교부장 역시 9월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측의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국내재정적자와 무역불균형 및 실업률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이 경제안보와 금융안보 등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국제경제무대에서의 역할 증대로 인해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중국이 우선시되고 대만문제는 부차적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는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시기에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압력이 끊이



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대만 해협의 안정과 지역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미국 의회를 비롯한 국내정치세력의 압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핵심이익 강조와 對미 공세

중국은 2010년 GDP 5조8,786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일본(5조4,742억 달러)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국가들이 2~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여전히 8%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소위 ‘중국역할론’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미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즉,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현실적·구조적 제약성을 상호인정하고 ‘미중 전략·경제 대화’와 ‘G20 정상회의’ 및 중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관계를 향후 전략적 협력 위주로 운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2011년 1월의 중미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G2’로 자리를 굳힘으로써 양국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서도 미국과의 책임을 분담하고, ‘G2’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이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양국간 무역마찰, 위안화 절상, 달라이라마 문제, 對대만 무기수출 문제, 이란 핵문제, 동아시아 문제(남중국해 영토분쟁, 천안함 사건 등) 등을 둘러싼 상호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으며 새로운 패턴의 갈등과 협력관계가 나타났다. 즉, 기존의 미중관계는 미국의 對중 정책에 대해 중국이 대응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미국의 국내정치(대통령선거 및 중간선거 등)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의 미중관계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은 확대되었지만,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기존의 구조적인 요인(체제와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의 차이 등)뿐만 아니라,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 확대 및 핵심이익을 둘러싼 대립 등으로 더욱 다양화·다원화되는 새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소위 ‘중국역할론’의 증대는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국력격차가 이전에 비해 축소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게 만들었고,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대응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을 제공하였다. 중미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도록 하는 공세적인 대미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¹³ 실제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9년 오바마 美 대통령 방중 시 서로의 핵심이익과 관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는 2010년 5월 개최된 ‘미중 전략·경제대화’ 개막 연설에서도 반복되었다. 외교담당 국무위원인 다이빙궈(戴秉國) 역시 주권안보와 영토보존 및 국가통일을 중국의 핵심이익으로 언급하였다.¹⁴

중국의 핵심이익으로서 대만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중국의 국제적 지위 제고에 따른 공세적인 대미정책을 잘 나타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하였고, 미국이 실제로 무기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하고 대만에 대한 판매를 강행하려고 하자 군사교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회사에 대한 제재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전례 없는 강경한 기조를 보여주었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상’이 점차 객관적인 현실이 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의지와 능력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편에 설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함으로써 대만문제에 대해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대미관계에 있어서 극도의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은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미국과의 국력 격차 축소에 기인한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는 주로 최근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중국의 인식이 양국관계의 경쟁구도를 심화시키고 있고,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미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양안교류협력의 강화

대만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집권 시기 급진적인 독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극도로 냉각되었던 양안관계는 대만경제 부흥과 함께 양안관계 개선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당 마잉주 총통 집권 이후 평화와 안정 분위기로 급선회하였다. 마잉주 정권은 중국과 통일도, 대만의 독립도, 양안 간 무력충돌도 하지 않겠다는 삼불정책 아래 중국인의 직항과 관광 및 환전을 허용하는 ‘신삼통’(新三通) 실현이라는 경제 우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존에 강조되었던 대만 독립과 무력 통일 보다는 양안관계의 평화와 번영, 협력과 교류를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였다. 중국 역시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당면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대만 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편입 내지는 양안 단일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만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2008년 5월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중국과 대만은 양안 간 대화 재개와 경제협력의 심화·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10년 6월에 열린 제5차 양안회담에서는 양안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ssociation: ECFA) 체결에 합의하였다. ECFA의 체결은 인구 14억 명, GDP 5.3조 달러에 이르는 경제공동체인 ‘차이완’(CHIWAN)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대한 사건이다. 2012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도 마잉주 총통은 안정적인 양안관계의 유지를 통한 대만경제의 부흥을 강조함으로써 재선에 성공했다. 향후 마잉주 ‘집권 2기’에도 양안관계는 ‘경제’를 우선으로 하고 ‘정치’는 추후에 논의하는 점진적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1] 2008년 이후 양안 간 고위급 회담 추진 경과

시기		주요 협의내용
제1차	200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안 항공 직항(전세기) 개설(주말 36편) ○ 중국인의 대만 단체관광 조건부 허용
제2차	200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삼통’(大三通) 합의: 해운 및 항공 직항편 개설, 우편업무 협력 강화 ○ 식품안전관련 상호 협의시스템 구축
제3차	200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직항편 및 정기 운항편 확대 ○ 공동 범죄퇴치 및 사법 공조, 금융 분야의 협력 강화
제4차	2009.12	○ 농산품 검역 협력, 표준검사 인증 협력, 어선 선원 노무 협력
제5차	2010.6	○ 중·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 합의
제6차	2010.12	○ 의약·위생 협력 및 여행 자유화문제 협의
제7차	2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안전 협력 협의 ○ 5대 신흥산업(LED 조명, TFT-LCD, 무선(無線)도시, 저온물류, 전기자동차) 분야 상호협력 강화

*자료: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http://www.gwytb.gov.cn/index.asp>); 해협교류기금회(<http://www.sef.org.tw>); 행정원대륙위원회(<http://www.mac.gov.tw>) 등 참조 작성.



이처럼 중국과 대만 간 ECFA 체결로 대표되는 경제교류협력의 확대와 심화는 중미관계에서 대만문제의 전략적 지위가 낮아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안관계의 개선과 대만해협 긴장완화라는 상황 속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만정책은 기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강화된 중미협력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전 부시 행정부 시기에 보여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했다. 미국은 2008년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나타난 양안 간 교류협력 강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대만문제가 중미관계의 민감한 의제로 부각되는 것을 경계했다. 실제로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양안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추세 속에서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음으로 인해 미국이 양안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중국 역시 미국으로 하여금 양안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대만과의 교류협력 확대 과정에서 대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적인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ECFA의 체결은 대만의 경제적 실익 추구하고 통일을 염두에 둔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양안의 전략적 고려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물이다(신종호 2010b), 형식적으로는 양안간의 교역 활성화가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한 과정인 동시에 중화경제권의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¹⁵ 특히 이번 ECFA 체결은 상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모두 대만에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양안 간 참여한 대립이 예상된 농수산물 분야는 중국 측이 상당한 양보를 함으로써 대만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며(商務部新聞辦公室 2010),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이라는 정치적 요인을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외부위협이 촉발하는 국내혼란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정책의 목표 역시 국가주권과 안보 및 국가이익의 유지에 두고 있다(Wang 2011, 69). 다만, “주권, 안보, 발전”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위협하는 대상으로 특정국가를 상정하기 보다는 대외적으로는 도광양晦(韜光養晦)의 태도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당분간 저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주권과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만의 독립을 억제하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안관계가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과 함께 중국 연해지역에서 정찰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만정책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는 평가 역시 가능하다. 최근 양안관계의 강화 과정에서 미국 내에서는 그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즉, ‘대만관계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미 국방부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민해방군이 대만 독립 억제 능력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과 대만 간 군사력 균형의 추가 중국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0, 1). 또한 미국은 대만 마잉주 총통 취임 이후 중국과 대만 간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대해 경계심과 동시에 투명성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는 양안관계의 발전이 미국의 통제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V. 맺음말: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 전망

향후 10-20년간 미국패권의 쇠퇴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지만,¹⁶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견이 존재하지는 않아 보인다.¹⁷ 그렇다면 ‘G2’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질서구축 과정에서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수교 이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해 온 중미관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패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대립과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미 양국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경우 양국관계는 물론 동북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상호간에 공동인식이 존재한다. 2011년 1월의 중미 정상회담에서도 양안간의 평화와 안정 및 중미간의 핵심이익 존중 등이 양국관계의 안정적 발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人民日報〉 2011/1/20). 중국외교부 부부장 추이텐카이 역시 현 단계 중미관계의 주선율을 공영과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만문제가 중미간의 사회제도와 역사문화 및 국가발전단계 등의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 모순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차이에 양국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崔天凱 2011).

그러나 대만문제는 중미양국을 군사적 충돌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해도 대만문제는 중국과 미국의 상호불신과 오해로 인해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즉,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문제의 해결이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대만인의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정책의 핵심 변수는 중국이다. 미국은 현재 새로운 국제질서 구도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유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대만을 희생시켜서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향후에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카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쉽지 않다. 물론 최근 미국 내에서는 대만과의 불안정한 관계의 단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중국이 주변국 외교에서 보여준 공세적 대외정책을 경험한 바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과의 관계 단절 혹은 지원 감소를 중국이 미국 국력 쇠퇴를 자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양보는 중국의 또 다른 요구에 대한 미래의 양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Tucker and Glaser 2011, 23-37).

따라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거나 대만에 대한 안보공약을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만에 대해 갖고 있는 전략적·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는 2010년에 11% 성장하는 등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만과 미국의 수출입 증대로 2010년 기준 대만은 미국의 9번째 무역대상국이고 미국은 대만의 3번째 무역상대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미국은 국제정치경제 무대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당분간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입장을 묵인 내지는 지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그 구조 속에서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미관계에서 대만문제가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대만은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동시에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대만의 독립을 묵인 내지는 방조할 수 있는 여건 역시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대만과의 비정치적인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¹⁸ 또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은 대만으로 하여금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지·지원할 것이라는 신념을 굳건히 하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대만의 전략적 지위를 쉽게 포기하지도 않겠지만,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충돌이나 갈등을 원하지 않는 '상호모순적인 균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양국간 전략적 협력 기초 유지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긴장이 대만해협에서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역내 우위를 인정하



고,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중국의 핵심이익인 대만문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

다만 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 대해 현재보다 더 공세적인 입장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문제를 내정으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이 대만문제를 핵심이익으로 자주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 대해 과거처럼 외교부성명 발표 등과 같은 형식상의 반발에서 벗어나 관련 부서(외교부, 국방부, 전인대 의사위원회, 정협, 국무원 대만판공실 등)가 공동 대응하거나 무기판매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방침을 밝히는 점 등이 이를 반증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미국의 오만한 태도이자 중국의 내정에 대한 간섭이며 자신들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미국에 대해 대만문제로 대표되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히려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은 양안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외부요인(미국)이 내정에 개입하는 여지를 줄이고자 할 것이다. ■



[부록] 수교 이후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미관계(1979~2011)

시기	주요 내용
수교 이전 (1972~1978)	1972년 2월 닉슨 방중, 《중미공동성명》(일명, “상하이커뮤니케”) 발표 1978년 12월 16일 《중미 수교 공동성명》 발표
1979년	1979년 1월 1일 중미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 미국: 대만과의 모든 ‘외교관계’ 단절, 대만주둔 미군 연내 철군, ‘미국-대만 공동방어조약’ 폐기 등을 선포
1982년	‘8·17 커뮤니케’ 공포 - “미국은 對대만 무기 판매 정책을 중단하고,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의 성능과 수가 수교 이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줄여 일정 시간 경과 후 최종 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
1992년	미국, 대만에 150대의 F-16 전투기판매 선포
1995년	5월 미국, 리덩후이 대만 총통 방미 허용 - 중국정부는 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항의
1997년	10월 장쩌민 국가주석 방미, 《중미공동성명》 발표(10.29) - 미국: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대만독립 반대, 대만의 UN 가입 반대, ‘8·17 커뮤니케’에 근거한 對대만 무기판매 문제 처리 등 합의
2001년	4월 1일, 중국전투기와 미국정찰기가 해남도 상공에서 충돌 4월 5일, 미국이 대만에 대해 키드급 구축함 4척, 재래식잠수함 8척, P-3C 순찰기 12대가 포함된 무기판매 결정, 중국의 격렬한 항의
2002년	2월, 부시 미 대통령 방중, 장쩌민 주석과 정상회담 - 대만문제의 중요성 확인, 미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 확인 등 3월 7일, 미 의회의 대만 국방부장 방미 허용 3월 19일, 미국에서 대만의 WHO 옵저버 참여 지지 법안 통과 - 중국은 WHO가 독립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라는 점을 들어 이를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간주
2003년	10월 19일, 방콕 APEC 정상회의 - 미중 정상은 대만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 강조 12월, 원자바오 총리 방미 시, 대만당국의 ‘국민투표’ 실시 검토에 반대 - 미국 역시 대만과 중국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양안현상 타파에 반대
2005년	12월, 부시 방중,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대만독립 반대, 대만과 중국 중 어느 일방에 의한 양안현상 타파에 반대”
2008년	10월 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등 64억 달러 수준의 무기 대만 판매 결정 - 중국, 강력 항의
2010년	1월 20일 미국, 2008년에 결정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 발표 - 중국, 미국과의 모든 군사협력 중단, 상호 핵심이익 존중을 촉구
2011년	9월 21일 미 국방부, 대만에 5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 패키지 판매 - 중국외교부, 미국에 강력 항의 및 재발방지 요구

자료: 中國外交部 홈페이지 참조 (http://www.fmprc.gov.cn/chn/pds/gjhdq/gj/bmz/1206_22/sbgx/)



주(註)

- 1) 반면 대만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진행에 따라 ‘대만화’의 가속에 따라 대만의 독자성을 주장하고, 특수한 ‘국가對 국가’ 관계를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다.
- 2) 양안관계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관계, 中國大陸과 臺灣地區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서의 중화인민공화국과 그것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서의 대만의 관계, ‘하나의 중국’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하나가 아닌 중국과 대만의 모호한 정치적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문흥호 2000, 215-217).
- 3) ‘삼통’(三通)이란 중국과 대만과의 직접 교역을 의미하는 통상(通商), 우편물 교환을 의미하는 통우(通郵), 항공기와 선박의 직항을 의미하는 통항(通航)을 지칭하고, ‘사류’(四流)는 경제 교류, 문화 교류, 과학기술 교류, 체육 교류를 지칭한다.
- 4)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세계에서 중국은 오직 하나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이며, 중국의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있다”는 것이며, “두 개의 제도”란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간 공존하고,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서로가 상대방을 파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中共中央文獻編輯委員會 1994, 58).
- 5) 「국가통일강령」에서는 단계적인 통일 추진을 위해 3개의 과정을 두고 있다. 제1단계는 교류와 호혜 단계로서, 상호 간 정치 실체 인정, 상호 간 교류의 질서와 규범 확립 및 교류 증대기구 설치, 민간 교류 증대 등을 포함한다. 제2단계는 상호 신뢰구축과 협력 단계로서, 평화협정 체결, 삼통 실시 및 고위인사 교류 등이 포함된다. 제3단계는 통일협상 단계로서 통일협상기구의 설립 및 통일 실현 단계를 지칭한다.
- 6) 2010년 1월 30일 미 국방부는 대만에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한 67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0/1/31.
- 7) 1970년대 중미관계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 양국관계의 발전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3개의 공동성명은 1972년 2월 ‘상하이 커뮤니케’, 1978년 12월 ‘수교 커뮤니케’, 1982년 ‘8.17 커뮤니케’ 등이다.
- 8) 대만해협위기를 둘러싼 중국의 위기관리 행태와 중미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호(2010, 121-126) 참조.
- 9) 1990년 대만이 단독 관세지역 자격으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가입을 신청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고, 대만의 아태지역 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가입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1992년 대만에 대한 F-16전투기 150대와 E-2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결정을 통해 대만의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 10) 이에 대해 대만 국방부장 장충링은 “대만 영해 12해리 이내로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각 공격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만 전역에 대해 準전시상태를 선포한다.
- 11) 당시 중국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錢其琛 2003, 307-308), (<人民日報> 1995/5/23), (<解放軍報> 1995/8/1).
- 12) IMF의 보고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 규모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10배인 4조540억달러에 이르며, 경제위기의 발원지가 미국인 관계로 미국과의 실물경제 연계, 무역의존, 금융통화 체제 관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다(이윤석



- 2010).
- 13)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공세적 대미정책에 대해서는 김재철(2010)을 참조.
 - 14) 다이빙귀가 언급한 중국의 3가지 핵심이익이란 첫째 중국 공산당의 영도, 사회주의 제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이며, 둘째 중국의 주권안보, 영토보존, 국가통일이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戴秉國 2010).
 - 15) 즉, 양안의 경제 발전 수요 및 산업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조기자유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대만의 취약 산업, 농산품 개방 및 중국 인력 이동에 대한 부분을 협정에서 제외시켜 중국 측의 최대한의 성의와 선의를 표현하였다. 양안 경제협력의 전략적 함의와 양안관계에서의 미국의 역할 및 중국의 ‘해협서안경제구’가 대만경제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는 Chen(2009) 참조.
 - 16) 독일 시사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의 발행인 요제프 요페는 미국의 패권 쇠퇴설은 10년마다 되풀이되는 근거 없는 유행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의 쇠락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근거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런 미국을 ‘디폴트 파워’(default power) 라 규정한다(Joffe 2009).
 - 17)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했고, 2025년경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겠지만 지금보다는 ‘덜 지배적인 국가’로 변모할 것이며, 그 공백을 중국 및 다른 BRICs 국가들이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NIC 2008).
 - 18) 최근 연임에 성공한 2기 마잉주 정부 역시 양안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확대하겠지만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다거나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동참하는 등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다(문흥호 2012, 152-153).



참고문헌

- 김재철. 2007.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 서울: 폴리테이아.
- 김재철. 2010. “세계금융위기와 중국의 대미정책.” 〈中蘇研究〉 제34권 제2호: 15-40.
- 문흥호. 2000. “양안관계연구.” 《중국정치연구론: 영역, 쟁점, 방법 및 교류》. 정재호 편. 서울: 나남.
- 문흥호. 2008. “중미관계와 대만문제: 미국의 대 대만정책을 중심으로.” 〈中蘇研究〉 통권 117호: 15-40.
- 문흥호. 2012. “2012년 대만 대선과 마잉주정부의 대내외정책 전망.” 〈국방연구〉 제55권 제1호: 1152-153.
- 서진영. 2006. 《21세기 중국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 신종호. 2010a. “중국의 국제위기관리 행태 및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 〈中蘇研究〉 제34권 제2호: 121-126.
- 신종호. 2010b.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 및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 이윤석. 2010. “글로벌 금융위기 추이 및 전망.” 〈한국경제포럼〉 2집 2호.
〈연합뉴스〉. 2010. 1월 31일.
- Chen, Edward I-Hsin. 2009. “Strategic Implications of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ARI Working Paper Series* 11.
- Gertov, Melvin and Hwang, Byong Moo. 1990.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Gilley, Bruce. 2010. “Not So Dire Straits.” *Foreign Affairs* Vol.89, No.1(January/February).
- Glaser, Charles. 2011. “Will China’s Rise Lead to War?: Why Realism Does Not Mean Pessimism.” *Foreign Affairs* Vol.90, No.2(March/April).
- Joffe, Josef. 2009. “The Default Power: The False Prophecy of America’s Decline.” *Foreign Affairs* Vol. 88, No. 5(Sep/Oct).
- Lieberthal, Kenneth G. and Wang, Jisi. 2012. “Addressing U.S.-China Strategic Distrust” *John L. Thornton China Center at the Brookings Institution* Number 4.
- Lampton, David M.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looking each other straight in the eyes.”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8 Iss.62, (November): 703-727
- Miller Center. 2011. “A Way Ahead with China.” *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 March 29.
- Morrison, Wayne M. 2009. “China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June 3.
-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2009.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November.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0.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Owens, Bill. 2009. “America must start treating China as a friend.” *Financial Times* November 17.
- Tucker, Nancy Bernkopf and Glaser, Bonnie. 2011. “Should the United States Abandon Taiwan?” *The Washington Quarterly* 34:4(Fall): 23-37.
-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84. “U.S. Overseas loans and Grants and Assistance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ashington D.C.: GPO.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0. “Trade in Goods with Taiwan”. <http://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830.html>(검색일: 2012.)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2. "MAJOR FOREIGN HOLDERS OF TREASURY SECURITIES".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data-chart-center/tic/Documents/mfh.txt>(검색일: 2012.)
- Washington Post. 2010. "U.S.-China relations to face strains, experts say." January 3.
- Wang, Jisi. 2011.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Foreign Affairs* Vol.90 No.2 (March/April.)
- Zakaria, Fareed. 2008. *The Post-American World*.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 中共中央文献编辑委员会. 1994. 《邓小平文选(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 〈解放军报〉. 1995. "忠实履行我军神圣使命: 纪念中国人民解放军诞生68周年." 8月1日.
- 〈解放军报〉. 1995. "迟浩田在国防部举行的庆祝建军68周年大会上致祝酒辞." 8月1日.
- 〈解放军报〉. 1996. "民主'外衣'下的'台独': 再评李登辉最近关于两岸关系的谈话." 3月7日.
- 〈解放军报〉. 1996. "显性台独'与'隐性台独'的双簧戏: 评彭明敏近期言行." 3月8日.
- 〈人民日报〉 1995. "全国人大外事委员会声明." 5月23日.
- 〈人民日报〉 1995. "全国政协外事委员会声明." 5月24日.
- 〈人民日报〉 1995. "美国究竟要把中美关系引向何方." 6月18日.
- 阎学通. 1997. 《中国国家利益分析》.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牛军. 1998. "论克林顿政府第一任期对华政策的演变及其特点." 《克林顿治下的美国》. 牛军 主编.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錢其琛. 2003. 《外交十記》.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牛军. 2004. "三次台湾海峡军事斗争决策研究." 〈中国社会科学〉.
- 顏聲毅. 2004. 《當代中國外交》.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戴秉國. 2010. "堅持走和平發展道路."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774662.htm>).
- 孫哲. 2010. 《全球金融危機與中美關係變革》. 北京: 時事出版社.
- 崔天凱. 2011. "新时期中美关系的主旋律." 崔天凯副部长在第二届“蓝厅论坛”的演讲. 1月14日. (<http://www.fmprc.gov.cn/chn/gxh/tyb/zyxw/t785986.htm>)
- 〈人民日報〉 2011. "商务部新闻发言人就海峡两岸经济合作框架协议签署发表谈话." 1月20日.



필자약력

신중호(申鍾浩) 경기개발연구원(GRI) 통일·동북아센터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北京大學(Peking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양대학교 강사 및 국회입법조사처(NARS)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정치 외교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며, 최근 연구성과로는 "중국-대만 간 교류협력의 특징과 남북관계에 대한 시사점"(2010), "중국의 국제위기관리 행태 및 미중관계에 대한 함의"(2010), "중국의 소프트파워외교의 전개와 국제정치적 함의"(2009),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전략과 미중관계: ARE, SCO, 6자회담을 중심으로"(2008) 외 다수가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소(소장: 전 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EAI 중국연구패널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외교안보팀장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